

제429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5년11월11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교육부 소관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교육부 소관
-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교육부 소관

상정된 안건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가. 교육부 소관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2
가. 교육부 소관
-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2
가. 교육부 소관

(15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0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오늘은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랜만에 다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교육의 방향과 철학을 실제 교육환경에 적용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고민해 오신 정책적 문제의식과 깊이 있는 제안으로 오늘 회의가 한 층 더 의미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어질 소위원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본격적인 예산안에 논의에 앞서 국정감사 후속조치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종합감사 당시 제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사항들을 절대 흐지부지 끝내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국회 출석요구를 거부하며 국민을 무시한 증인들의 오만한 태도,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대와 숙명여대의 연구윤리 평가 부실 문제, 교육부의 부적절한 선문대 지원 의혹,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사건에 대한 부실 감사 그리고 서울대병원 상임감사의 취업 알선, 금품수수 의혹 등은 교육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들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야 간사실에서 국정감사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14일 예정된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에서 관련 기관 및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조치, 교육부에 대한 종합감사 요구, 감사원 감사 청구,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체회의까지 여야 간사께서는 각 사안의 사실관계 등을 정리해서 위원회가 일관된 입장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김준혁 위원님을 대신해 진선미 위원님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합의가 된 것 맞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상정·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서면질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교육부 소관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교육부 소관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교육부 소관

(15시10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2026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교육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등에 관해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최고진 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최고진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교육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6년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교육부는 국가의 균형성장과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화 완화를 위해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 성장을 이끄는 교육과 연구의 허브로 키우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국가책임 AI 인재 양성을 위해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영유아 부문에서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유보통합 주요 과제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으로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영유아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 교육부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3979억 원, 추경예산 대비 3조 6399억 원이 증액된 106조 2663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신설하는 영유아특별회계는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사업, 일반회계 보육사업과 신규 유보통합 사업을 포함해서 총 9조 2233억 원이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5408억 원이 증액된 16조 3683억 원입니다.

교육부 소관 두 개 기금은 사학진흥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올해 대비 1909억 원이 증가한 6조 969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 분야 및 부문별 예산안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전년 대비 6658억 원이 증액된 82조 465억 원이 편성되었고 고등교육 부문은 4678억 원이 증액된 16조 16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3172억 원이 증액된 6조 883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대해 매우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사항은 향후 교육부의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정부안으로 제출된 교육부 예산이 원만히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최고진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정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현장과 각계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완성도 높은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

한 국가교육 과정 개정 등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상시적으로 대응하고 조사, 분석, 점검에 기반한 국가교육 과정 개발·고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국민참여위원회와 국민의견수렴조정전문위원회의 운영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26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와 기금 없이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억 9100만 원 감액된 101억 51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출 재구조화를 실시하였으며 국민 의견수렴 등 확대가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여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주요 사업비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은 44억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주요 업무 수행을 위한 전체회의 등 법정회의 운영을 위해서 8억 8100만 원을 편성했고 교육연구센터 운영과 정책연구 수행을 위해서 25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교육 과정 개발·고시 지원을 위해서 3억 7000만 원, 국민 의견 수렴과 현장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6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는 34억 11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22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어진 법정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위원장 김영호 차정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노트북에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 대체토론 순서인데요. 희망하시는 분들만 정리해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들을 가나다 순으로 저희가 나눠서요. 총 일곱 분이 신청하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강경숙 위원님을 시작으로 두 번째 김문수 위원님, 김민전 위원님, 박성준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정성국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까지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맨 마지막에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강경숙 위원님은 좀 나중에 하실래요? 그러면 진선미 위원님 뒤, 제일 마지막으로 오실래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강경숙 위원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시면 김문수 위원님부터,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5분 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민주시민교육팀을 만들었지요, 교육감님?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김문수 위원 민주시민교육팀은 제가 알기로 22년 9월 달에 윤석열 정부 때 다른 부서와 통폐합하면서 없어졌었어요. 그리고 내란 계엄을 했고 다행히 민주시민교육팀 만들고 저도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아무튼 이거는 잘한 것 같은데 임시 조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교육부장관 최고진 1월 1일 조직 개편할 때 정식 과로 출범시키기 위해서 준비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정식으로 하기 전 단계, 준비. 그러면 정식 과로 가는 겁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김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4777억을 증액을 했는데 세 가지 방식으로 9개 학교에 1728억 원을 네 가지 사업으로 균등 배분하고 또 9개 학교에 차등으로 1개 사업을 가지고 차등 지급을 하고 이제 마지막 5개 사업은 세 학교에만 1850억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앞의 9개 학교에 차등화하는 것도 그냥 균등으로 생각을 하고 3000억을 9개 학교로 나누면 한 학교당 약 333억 정도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3개 학교는 1850억. 이 학교는 세 학교니까 600억씩 가다 보니까 6개 학교는 약 300억 내외로 가고, 이 세 학교는 600억에다 300억 하니까 한 900억씩 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 학교에 선정이 안 되는,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너무 적은 예산으로 서울대 만들기를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이런 문제의식이 있겠더라고요, 제가 사정을 들어 보니까.

이게 괜찮습니까? 물론 이걸 무조건 똑같이 다 나누는 것도 문제는 있겠지만 약간의 차등을 주더라도 가급적 9개 학교에 다 균등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 4777억이라는 예산이 적으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좀 더 가게 해야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시작이 그럴 듯하게 출발할 텐데 이렇게 가 가지고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훈 위원 장관, 장관.

○교육부장관 최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김문수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감님 시절부터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놓쳐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부장관님.

○교육부장관 최고진 괜찮습니다.

우려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거점 국립대학이 교육과 연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여건이나 각 대학의 준비도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지원하게 됨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시작은 약간 부족하게 출발하지만 계획대로 반드시 지역균형 성장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어쨌든 이 세 학교에 선정된 학교는 한 900억씩 가는데 그렇지 못하는 6개 학교는 300억 내외 심지어는 또 차등으로 받다 보면 300억도 안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예산심사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저 9개 대학 총장님들 아직 안 만나 보셨지요, 만나 보셨나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처음에 취임하고 제일 먼저 만나 뵙고 의견도 들었고 그때 당시에 그런 우려의 말씀도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또 총장님들 입장도 이해가 충분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 말씀이 이제 글로컬 대학에서도 전국의 총장님들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경쟁 속에서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고 또 탈락한 학교가 있어서 상당히 상처도 받고 대학가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글로컬 대학이 선정 안 되면 굉장히 무능한 총장이 되는데 지금 서울대 만들기 10개도 이 9개 대학에서 경쟁돼서 3개 대학만 선정이 되면 나머지 대학의 총장님이 굉장한 허탈감을 받으며 경쟁하는 구도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정부의 입장도 좀 이해가 되긴 하지요. 다만 제가 지난번에 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산학 협력구도를 우리 교육부에서 조금 공격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진짜 장관님도 영업을 하셔서 이 기업의 산학구조를 대학에 유치를 시켜서 허탈감이 좀 안 생길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들이 정말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산학 협력구도는 아마 대한민국이 굉장히 뒤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비해서도 뒤쳐져 있는 것 같아서 장관님께서 남다른 노력을 쏟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굉장히 경쟁 구도 속에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으니까 소통도 좀 자주 해 주시고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장관님, 저도 당부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번 26년 예산안을 보게 되면 지금 김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립대학 육성 사업과 그리고 RISE 사업 예산이 그래도 대폭 늘어서 저는 고등교육에 있었던 입장에서 매우 반갑고 또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고등교육이 예산의 불모지였고 그게 또 어떤 면에 있어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느냐 이런 차원에서 대폭 예산이 늘게 된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 것이냐, 일회적으로 그동안에 고등교육 정책들이 일회적으로 예산 지원하고 나면 그다음 단계를 또 징검다리처럼 뛰어넘고 뛰어넘고 이러다 보니까 지속가능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어렵게 고등교육의 예산이 늘었는데 이것이 비효율적 사용되어서 또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국무조정실에서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에서 점검한 RISE 사업의 경우에도 3개의 플랫폼만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940건이 적발되고 408억 원의 부적절한 비용이 집행되었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국 교육부가 얼마나 잘 감시·감독하는 체제를 만들 것 이냐. 그래서 고등교육에 간만에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그냥 교수들의 헛된 연구비, 지원 성과는 제대로 안 났다 이런 평가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서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감시·감독을 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 5년 간 어린이집 급식 점검에 따른 위반 현황을 보게 되면 최근 5년간에 1699건이 적발되었 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또 뭐 보관이 잘못되거나 이런 경우들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주신 답변은 급식위생 관리지원금을 지원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급식을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 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실제 예산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 다. 그리고 지원 대상인 곳 도 5789개소로 전체의 30%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서요. 어떤 면에서 보면 원생이 50인 이하인 어린이집이 훨씬 더 열악하고 재정적으로 취약할 텐데 이 50인 이하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특히, 우리 아이들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잘 봐 주셨으면, 어떻게 하면 50인 이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지 이 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초학력보장위원회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 한국 교육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것을 효율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고비용 저효율이다 이런 지적들이 사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초중고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에 비해서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들의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고 심리적으로 더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기초학력보장 지원 예산이 총 3095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올해 예산에서도 좀 증액도 됐고 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 니다.

그동안에 교육부장관 소속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보게 되면 23년은 12월 22일 그리 고 24년은 12월 10일 해서 단 1회의 회의 개최로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으로 계실 때에도 기초학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다 이 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단 일회적인 회의가 아니라 정말 돈 들이고 공부
가 제대로 안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이런 일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획기적으로 늘어난 고등교육 재정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첫 번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고 지속,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염려가 되지 않는데 다만
이 돈이 정말 효율적으로 목표한 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말씀 주신 대로 감시·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 어린이들의 건강을 정말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는 말씀 감사하고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초학력 문제는 국정감사 때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중·고
교육에서는 학생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가장 최우선의 과제로 챙기면서 이쪽에 예산
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역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준 위원** 장관님, 제가 국정감사 하면서 장관이 해야 될 일 중에……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아마 새로 취임하시면 새로운 일, 새로운 업적을 만드
는 데 힘을 쏟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개선하고 바로잡는 것
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치를 얘기할 때 바로잡는 것, 그것이 출발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
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장관님도 관심 있게 봐 주시고 또 교육부장관으로서 수행할 업무
에 대한 일들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관님, 지난번 국정감사 하면서 사학재단 그리고 사립대학 비리 문제를 많은 위원들
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박성준 위원** 사립대학이라든가 사학재단 같은 경우는 재단 전입금은 거의 없이 국고
보조금이라든가 등록금으로 유지가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공공의 영역으
로 넘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장관님도 보시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박성준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국민의 세금이 그만큼 들어갔다고 하면 견제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사학재단의 문제는 견제 장치가 제대로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죽 보니까 교육부 감사관실 여기에서 감사시스템 문제, 특히 사학
재단에 대한 감사 예산과 인력 보충 문제를 장관님께서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보충을 하
겠다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 그것은 자료를 만들었고 또 예산 반영이 됐습니까, 어떻습니
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실제로 말씀, 그러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학 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 문제를 교육부가 책임 있게, 그러니까 자율성은 존중하되 비리에 대해서는 엄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 인력이 상당 부분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 인력을 더 확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그것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랬을 때 시도교육청에 감사 경험이 있는 분을 일정한 기간 파견을 받아서라도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 계획을 완성해서 내년도에 추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국회에서 예산 증액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결소위에서 감사관실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인원에 대한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더 자료를 보완해 주시면 예결소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 위원들께서도 행안위에 있는 위원들과 서로 소통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적극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번 예산…… 오늘도 마찬가지로 않습니까? 앞으로 감사관실이라든가 또 장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반드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끝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예산 부분이라든가 인력의 확충에 대한 것들만 논의가 되더라도 사학 비리의 원천적 봉쇄라고 할까요, 일어나지 않는 예방적 조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봐요, 시그널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한 측면에서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리고 차제에 여기 계신 예결소위에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사학재단 사학 비리와 관련된 부분을 워낙 많이 얘기했고 인력 확충에 대한, 특히 제가 자료 갖고 있지만 이 사학재단에 종합감사가 미 실시된 학교가 워낙 많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리를 막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확실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교육부 관계자분들도 적극 검토하셔서 가지고 예결소위에 증액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리고 인력 운용 방안도 어떻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예산과 인력에 대한 것들도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제대로 그려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박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다가오는 11월 13일, 수능 날인데요. 우리 학생들의 수년간의 노력과 땀

이 결실을 잘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그동안 책상 앞에서 쏟은 시간, 정성 이런 것들이 잘 결실을 맺기를 바라고 침착하게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 선생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지는 수능의 이면에는 사실 수능생뿐만 아니라 묵묵히 시험 관리하고 감독하는 선생님들의 헌신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시험실 당 수험생 수를 24명 이하에서 28명 이하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관 수당은 21년에 15만 원, 22년 16만 원, 23년 17만 원에서 24년 역시 17만 원으로 동결이 된 상태입니다.

중등교사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 4654명 중에 88%가 수능 종사 중에 내가 인권침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이런 응답을 했는데요. 지난해에 서울에서 수능생 학부모가 감독관의 근무 학교까지 찾아와서 시위를 벌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감독관의 안전 보호 대책은 여전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 하루종일 서 계셨고 의자가 생긴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올해 수능 감독을 앞두고도 여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능 감독관은 서로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굉장히 고소 고발을 당할 수도 있고 인권침해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렇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수능 종사자 기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 실태를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교육부가 교육청과 함께 수능원서 접수 시스템 개선 또 수능 종사자 수당 인상 및 처우 개선, 수송지원 또 감독 인력 확대, 대학 관계자 및 공무원 감독관 자격 확대 등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셔서 저희 국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수능, 수험생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감독관 선생님들의 헌신이 모두 다 존중받는 수능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훈훈한 이야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국체육대학교의 수구 실기시험 불합격 사건과 관련해서 규정의 모호성, 감독관 관리 부실, 절차적 정당성 결여 등 여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정성국 위원 특히 같은 사안이지만 전년도인 2023년에는 합격 처리하고 2024년에는 불합격 처리된 불공정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입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국정감사 이후 지금까지 한국체육대학교는 후속 조치 등 의원실에 어떠한 보고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시의 공정성과 학생의 인권이 달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그때 당시 학부모 1명을 상대로 대학이 ‘소송해 봐라’ 이런 태도로 일관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태도가 전혀 변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는 단순한 행정 태만이 아니라 공정한 입시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학생 한 명의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교육부에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요청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교육부가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입시 요강의 불명확한 규정과 국제규범의 불일치 문제, 감독관 관리체계의 허점, 동일 사안에 대한 이중 잣대, 절차적 정당성 위반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음으로는 이 억울한 학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구제 방안이나 보상 방안이 없을지 그것까지도 한번 함께 국회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시의 공정성은 교육의 신뢰를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억울한 피해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일이 입시의 공정성을 세우는, 특히 한국체대의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당시 국정감사 때 정성국 위원님의 한국체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질의, 저도 주목했었는데요. 사실 위원장인 저 역시도 많은 의문이 남았던 사건으로 기억하고요. 사실 한국체대 총장에게 국정감사 끝나고 후속 조치를 반드시 하라고 저도 요청을 했었는데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군요.

○정성국 위원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학부모님에 대한 연락 조치도 없었고요.

○정성국 위원 예, 그래서 학부모님께 연락 드려 보니까 학부모님께서도 저희가 교육부 감사를 요청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정훈 간사님한테 의견을 전달하셔서 여당 간사님과 그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예, 상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답변이 얼마나 진실을 밝히는데 어려움을 주는지를 드러내고 이후로도 관계자분들께 제대로 좀 해 주십사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관님은 안 계신 자리에서요, 인천대의 유담 교수가 임용되는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언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은 9월부터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의원실에서 자료도 요청하고 그리고 언론들과도 협조하려고 했는데 언론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인천대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안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확인한 게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 이렇게 있는 거고 1차 심사는 스스로도 정량평가라고 했고요 2차, 3차는 정성평가라고 했습니다.

PPT 좀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저희는 정량평가에서 너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 1차 심

사에서 이 사람, 유담 교수가 특히 학력에서 만점을 받지 않았으면…… 저는 정말 학력에서, 말이 안 된다는데…… 학력에서 10점 5점 1점 이렇게 구분을 했던 건데요. 이게 다 정량평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점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만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제친 거예요. 그게 오늘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제가……

PPT 좀 올려 봐 주세요.

보이나요, 다른 분들?

우선 정량평가라는 개념이…… 장관님, 너무 잘 아시지요? 관계자들도.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점수가 객관적으로 매겨질 수 있는 평가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첫 번째 국감을 하고 나서 서면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구체적인 기준을 그때서야 준 거예요. 학력에는 뭐라고 했냐면 ‘국제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만점, 가산점을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찾아보니까 국제경영을 전공한 사람이 3명이 있어요. 그런데 유담은 경영학만 전공했어요. 그러면 3명을 만점을 줘야지요. 왜냐면 총장님도 와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학력을 만점을 주냐 그랬더니 국제경영학을 전공한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국제경영학을 석사, 박사에서 한 사람이 3명인데 그중에 한 사람은 5점을 주고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은 5점을 줘야 되는데 10점을 준 거예요. 그런데 유담은 여기에서 5점을 받았으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누군가가 친분을 통해서든 뭔가 이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정량평가인데도 정성평가인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저희한테 속인 거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경력 부분 평가에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얘기해요.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제경영학 강의 전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했다’, 이렇게 기준을 서면질에 답을 줬어요. 여기에 비추어 보면 더 엉망이에요. 왜냐?

경력 부분 PPT 보여 주세요.

지금 저기 보면요 7명이 국제경영학 강의 전력이 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석사생일 때 강의를 한 것일 뿐이고요, 유담 교수는. 나머지 여섯 분은 전부 강사나 교수나 연구교수나 조교수일 때 국제경영 강의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 중에 4명을 만점을 안 주고 유담을 만점을 줘요. 이것을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관님, 이것 정량평가라고 했습니다. 정량평가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다 만점을 주거나 똑같은 점수를 줘야지요. 그러고 나서 정성평가에서 그 사람의 논문 수준이든 또 강의 실력이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지요.

그런데 저한테 그것을 다 뭉뚱그려서 얘기한 것 같아요. 정량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서 후보를 정하고 그 후보 속에서 교수들이든 심사위원들이, 자기들이 볼 때 면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지요. 결국은 1차의 정량평가를 이런 기준에 맞도 안 되는, 적용이 안 되는 게 너무 명명백백한데 이 사람을 위해서 정량평가를 정성평가처럼 한 거예요. 저 4명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것도 훨씬…… 이 사람은 박사과정생 때 겨우 하나 강의한 것을 가지고 만점을 주고 저기에 교수나 강사로 몇 년간 강의를 했던 사람 4명을 떨어뜨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교육부장관 최고진**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인천경찰청에서 수사 착수했다는 언론보도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그 대학에 조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덧붙여서 자료제출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청, 진선미 위원님이요.

○**진선미 위원** 아니, 사립대도 그러면 안 되지요. 국감이나 상임위 활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저희 모두가 엄청난 유권자들로부터 일하라고 표를 받았습시다. 그러면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너무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여기는 국립대입니다. 국비가 제공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개 거점대학을,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하면서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국립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 그것도 강사들 몇만 명이……

그러니까 보면 그래요. 박사 유목민, 박사학위 가지고 제대로 정착 못 해 가지고 엄청난게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라도 교수 학위 가지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이 몇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정량평가를 정성평가처럼 악용해 가지고,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적어도, 모든 대학에 말씀드리고 싶지만 적어도 국립대만이라도 평가기준, 그러니까 정량평가를 이런 식으로 한 사례가 있는지를 저는 책임지고 확인하고 조사 결과, 전수조사해서 이 결과를 드러내고 문제 제기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장관님, 특히 국립대다 보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또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혹을 교육부가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만 너무 맡기지 마시고요. 교육부 자체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회 차원에서 국립대총장은 위증죄로 고발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위증죄로 저희도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용납하면 안 된다는 위원장의 확고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일정상 질의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취임한 이후에 제가 영유아 사교육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아 영어학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무슨 프랩학원이니 영어유치원의 레벨테스트, 그러니까 그게 뽐을 때만이 아니라 급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수준에 대한 레벨테스트까지 성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컨설팅 업체까지 등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변종되고

신중되는 이런 영어 사교육이 되게 많이 번성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에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정부나 국회에서는 어떤 규제라든지 법적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만한, 그런데 굉장히 신속하지도 못 하고 그러지를 잘 못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통계가 좀 확보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기본 예산도 없어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상황인데 장관님, 증액에 찬성하시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그럼요. 초중고 사교육비의 조사 예산은 한 15억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쪽 주셨던 유아 사교육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예산이 한 13억, 그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고 꼭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게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 증액을 마지막까지 신경 써 주시고 챙겨 주시고.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강경숙 위원** 또 국가시책, 무슨 특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확보하는 것까지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지금 진선미 위원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인천대 유담 교수 임용에 관한 의구심, 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뒤로 저도…… 저도 대학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 사안을 제가 좀 후속, 뒤에 들여다봤는데 정말 되게 황당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진선미 위원님 하시는 것에 저도 계속적으로 함께 보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전수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을 하는 것인데, 제가 작년에도 보면 국정감사에서 역사교과서 검정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고 그래서 검정에 부실한 것이 드러나서 취소한 것까지 감사 결과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에서 다뤄진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은 분명하게 조사가 필요한 거라고,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담 교수에 대한 것은 아까 진 위원님께서 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실적 심사에서 23명 중에 16등을 했는데 최종적인 점수 등수는 2등을 한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이나 연구, 학력이나 경력 점수가 만점을 받게 된 것인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국립대 교원의 임용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든지 심사 구조에 있어서 투명성이라든지 신뢰성 이런 차원에서 이것들을 엄중하게 살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교육부의 국민 신문고까지 접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연구실적으로 낸 그 논문들이 부정한 것이 없는지 제대로 그것까지 좀 살펴달라고 하는, 신문고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법령상으로는 교육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천대학에서 하고 있는 연구윤리위원회에다가 맡기기로는 본인이 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질까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리고 인천대 그 건이, 사실 유담 씨 문제 외에도 교수 임용과 관련해서 되게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립대 교수 임용의 심사 기준, 구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요청합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유담 교수님 건은 사실은 저희가 11월 4일 날 일단 인천대에 채용 관련 의혹이 드러나, 됐으니 여기에 대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자료 제출을 요청했었는데 대학에서는 ‘특별한 모든 절차, 규정 준수했다’ 이런 정도밖에 답이 안 왔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으로 연구 부정행위 검증을 요청하는 국민 신문고 민원이 있어서 이것은 마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연구수행 당시 소속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 소속기관이 고려대학교였다 그래서 11월 7일 날 고려대학교에 일단 부정행위 검증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수사를 지금 지켜보고 있고 어쨌든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강경숙 위원님 질의 마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2026년도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조정훈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대식 위원님, 정성국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 정을호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김준혁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박성준 위원님, 서지영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김민전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예산 관련 서면질의는 소위원회 심사에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교육부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2일 수요일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14일 금요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강경숙 고민정 김대식 김문수 김민전 김영호 김용태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서지영 정성국 정을호 조정훈 진선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장관 최교진
차관 최은옥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인재정책실장 최은희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학생건강정책국장 이해숙
대변인직무대리 차영아
감사관 김도완
디지털교육기획관 김현주
정책기획관 배동인
글로벌교육기획관 하유경
인재정책기획관 이주희
지역인재정책관 윤소영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화식
의대교육지원관 김홍순
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
교육자치안전정책관 전진석
교원학부모지원관 장미란
영유아지원관 박대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허동현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김선미
중앙교육연수원
원장 이난영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김연석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한상신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사무국장 박주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송하중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이하운